

W:WOOSUNG

2024년 7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7월 4주차 HOT ISSUE

- 집중 호우로 가축 76만7천마리 폐사
- 악취방지법 개정안 논란...반발 거세
- 전라남도, 한우사료비 125억 지원

집중 호우로 가축 76만7천마리 폐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내린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천마리가 폐사(지난 12일 기준)했다. 폭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피해 농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마련키로 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제때 나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도 개선 수준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23년 8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8월 한시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한시적으로 그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지역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 논란...반발 거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악취 실태 조사를 위해 조사자가 양돈장 등 사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이는 농가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안”이라며 “아무나 농장에 출입할 수 있으면 방역 시설은 무슨 필요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로 인해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악취 배출 현황 조사 공무원이나 조사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을 포함한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축사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농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악취 민원을 이유로 조사자가 사유지에 들어오고, 필요에 따라 나무나 흙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너무나 황당하다”라며 “축산농가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같다. 이런 취급을 받는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소모성질환이 발생해도 조사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소 사육·거래 늘는데 가축 전염병 검사 사실상 손놔



국내 염소산업이 성장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염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결핵병 등 가축전염병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염소에 대한 질병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급성장하는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의학계 등에 따르면 현재 염소는 브루셀라병·결핵병에 대한 질병 검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염소 방역 관련 사업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과 1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독약품 지원사업이 전부다. 염소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약 15억원이 할당됐다.

이처럼 정부 방역사업에서 염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지원사업이 제외되면서 현장에선 해당 질병에 대한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동근 오산흑염소농장 대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받은 일부 농장은 자체적으로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농장은 구제역을 제외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염소 사육·거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다른 축종과 교차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라남도, 한우사료비 125억 지원



한우고기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125억원 규모(농가 자부담 50%)의 사료 구입비 인상분 차액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은 50마리 이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사료 구입비 인상분 차액 지원은 1농가당 최대 30마리까지 적용된다. 사육마릿수가 50마리면 30마리까지만 사료 구입비 인상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육마릿수가 51마리 이상인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한마리당 농가 사료 구입비 인상액을 6만6000원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50%(3만3000원)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가 행정 지원으로 받는 최대 금액은 99만원이다. 농가의 사료 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11월말 정산한다.

전남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1만6000여농가의 76%에 해당하는 1만2000여농가가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간다. 도는 과거 한우값 파동 때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 소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6월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와 지역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다.

예천 양돈장 ASF 확진...8일 까지 경북·충북 6개 시·군 '일 시이동중지'



7일 경북 예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앞서 안동에서 2일 ASF가 발병한 지 불과 5일 만의 재발이다. 경북지역 ASF 확진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발병이 최종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돼지 960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5~6일 어미돼지 4마리가 폐사하자 6일 오후 5시께 방역당국에 ASF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SF 발병이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접지역인 영주·안동·의성·상주·문경과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의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내렸다. 이동중지 기간은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로, 총 24시간 동안 지속된다.

ASF 확진 사례가 추가됨에 따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가 확산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대(10km 이내) 돼지농장 2곳(2450여마리 사육)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해당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장 30여곳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예천 ASF 발생농장과 같은 도축장을 이용한 돼지농장 150여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시행해 추적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농가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예천에서 ASF 양성 농가가 나오면서 국내 ASF 확진 농가수는 201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44곳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8건, 강원 17건, 인천 5건, 경북 4건 등이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시 폐업자금 지원돼야”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폐업지원금 지원 등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내놨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시행은 지난 2018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안전성 제고는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란계 사육 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확대 시행을 목적으로 케이지의 수선 및 교체가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47억 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노후 케이지 농가의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양계협회는 농가 애로사항이 더욱 큰 만큼 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는 우선 제도의 조기 안착과 농가 이해를 위해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설지원 외에 사육밀도 확대 적용이 어려워 폐업하는 농가들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란계협회에서 법의 소급적용과 재산권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계란 생산량의 강제 감축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양계협회는 특히 “만약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이 부족해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실정한 동일한 사육 조건(0.075㎡/마리)의 계란을 수입해야 하며, 수입란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될 경우 동일한 금액의 산란계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